



“평화와 정의의 손 잡았습니다” 공동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를 구성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상건례 겸 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 2020년 전면 시행...수사권 조정 별도

자치분권위 도입안 마련...내년 제주 등 5개 지자체 시범실시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가장 '자치경찰법'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서울시 권의안,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전제로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을 두고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 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개 교섭단체 첫 회의부터 '충돌'

공수처·방송법 4월국회 처리 대립

4개 교섭단체 등록 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 등을 했으나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하고 개헌,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이날 오전 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후 처음으로 회동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기존 참석자에 더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새롭게 회동에 합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과 방송법 등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대립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못 해 (의사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5월1일까지 회기인데 마지막 날 본회의가 안 잡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일, 29일 열기로 한 본회의를 23일, 30일로 변경해서 개최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본회의 의사일정 등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는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논의 공간에서 다루는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예비후보자 공모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승용)은 2일 예비후보 자격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후보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지방선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여수갑 지역 위원장인 최도자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나현주·김현일·김화진 원외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남 22개 시·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접수를 받아 자격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살인·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 중점 심사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신청자격, 심사일정, 접수서류 등은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고, 바른미래당 전남도당(061-285-61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

정의당 전남도당 공직후보자 선출 돌입

정의당 전남도당은 2일 전남지역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일정에 들어간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공직후보자 선출공고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 후보등록 기간을 거친 뒤 18일부터 5일간 온라인투표를 통해 공직후보자 선출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 전남지사 후보로는 2~3명이 준비중에 있고, 이번 주중에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목포시장 후보로는 박명기 목포시위원회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전에 돌입했고, 곡성군수 후보로는 박우두 농민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남도의원 후보로는 박권철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이 목포시 제4선거구에서, 이보라미 영암군위원회 위원장이 영암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발을 누비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6·13 선거 현장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김명진 “8월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해야”



김명진 민주평화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제안은 가을까지 한반도 평화정착의 틀이 잡히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현실상부한 평화공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협상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문화와 체육 교류는 지속되어야 남북대화의 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도 평화동계올림픽처럼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자 “남측 예술공연, 평화협정 첫 단추”



박혜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13년만에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공연의 성공적 개최가 평화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공연 관람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와 남측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고 미·중·일·러시아간 다자외교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끌어내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제주 4.3 희생자 배상 이뤄져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제주 4·3 사건 70주년과 관련해, “냉전의 그늘에 갇혀있던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4·3 기념관에는 아직 제 이름을 새기지 못한 하얀 비석이 누워있다. 이 비석에 올바른 이름을 부여하고 일으며 세월이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 하고,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 이 때가 어찌면 생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고석규 예비후보 등록...장흥 명덕초 사은비 현화



고석규(61) 전 목포대 총장이 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후보등록 후 참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장흥군 회진면 명덕초등학교에 있는 난곡 도창옥 선생(1911~1956년)의 사은비를 찾아 현화했다.

난곡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항거하다 연희전문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뒤 56세에 세상을 뜨기까지 장흥에서만 출근 교사로 봉직하면서 외세를 극복하기 위해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민족주의 학자로 알려져 있다.

고 예비후보는 “향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단계별로 발표해 전남만이 아닌 푸른 에너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도민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박정욱·김형호 기자 cki@kwangju.co.kr